영국경제의 이해와 韓·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金均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硏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硏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현력 및 통일관련 국제현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互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02) 3460-1114 / FAX: 02) 3460-1144,1199

URL: http://www.kiep.go.kr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金均泰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국문요약

2차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경제는 1980년대의 개혁과정을 거쳐 1990년대이래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활기 있는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 속에서 연평균 2.95%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19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3년 현재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영국경제가 부활한 데에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이 있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초래된 엄청난 국력의 소모와 1945년 이후 잇따른 식민지의 독립, 영국경제의 활력 둔화 등으로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노사관계의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 IMF 구제금융신청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의 유연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1994년 노동당 당수로 취임한 후 1997년 총선에서 1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워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하는 중도적 방향을 지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EU의 5차 확대과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블레어 총리의 영국은 현재 유럽 및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영국경제는 노동당 집권 후 연평균 2%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유로지역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한편, 물가도 2.5%의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밑돌아 안정되었으며, 1994년 10.9%에 달하던

실업률도 2001~04년 현재까지 4~5%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내며 대처 이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 하던 블레어 총리는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정치

적 위기를 맞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일방적인 친미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반대에 부딪히면서 미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하겠다는 외교적 전략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EU 헌법조 약 비준 및 유로화 도입 결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등 여러 가

한국과 영국과의 경제관계를 볼 때,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수출대상국이며,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의 무역수지흑자 대상국가로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2003년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지 외교적 난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의 무역수지옥자 대상국가로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2003년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 5월부터 EU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에 진출했던 국내기업들이 최근 영국 현지의 생산공장을 동구 및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EU 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로서

1990년대 말부터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 관련 사항과 상호인정협정 등 몇 가지 통상현안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국간 경제관계

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례

국문요약 —————	1
제1장 서론	7
제2장 경제발전과정	9
1. 발전과정 개관	g
가.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 9	
나. 경제발전 개관 / 10	
다. 연도별 주요 사건 / 13	
2.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	15
가. 정치적 리더십 / 15	
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의 제고 / 19	
다. 노사관계 / 21	
라.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 24	
마.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25	
바. 고급인력의 양성 / 26	
사. 외자 유치 / 28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9
제3장 최근 경제현안	31
1. 최근 경제동향	31
가. 경제성장 / 33	
나. 실업률 / 37	
다. 물가 / 38	
라. 대외무역 / 39	

마. 투자 / 41 2. 주요 현안 및 과제	46
제4장 대외관계	51
1. 영국의 對EU 관계 ···································	51
2. 영국의 對美관계 가. 특별한 관계 / 65 나. 블레어 총리와 이라크 전쟁 / 66	65
제5장 韓·英 경제관계 ———————	70
1. 교역	
2. 투자	
<부록> 개 관	79
참고문헌 —	81
Executive Summary —	83

표 차례

<표	2-1>	연도별 주요 사건14
<표	3-1>	주요 경제지표32
<표	3-2>	영국 및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률34
<표	3-3>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35
<표	3-4>	예측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36
<표	3-5>	분기별 실업률 추이37
<표	3-6>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40
<표	3-7>	품목별 수출입 현황40
<표	3-8>	연도별 투자 현황42
<표	3-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43
<표	3-10>	국별 純해외직접투자44
<표	3-11>	국별 純외국인투자45
<표	5-1>	품목별 수출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71
<표	5-2>	품목별 수입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72
<표	5-3>	한국의 對영국 해외직접투자 추이73
<표	5-4>	영국에 진출한 주요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73
<표	5-5>	영국의 對韓 직접투자 추이74
<∄	5-6>	영국기언의 對諱 투자 현황75

그림 차례

<그림	2-1>	1인당 소득의 연도별 추이	10
<그림	3-1>	영란은행 기준금리 추이	46
<그림	5-1>	연도별 수출입 추이	70

Box 차례

<box 4-<="" th=""><th>1> EU 홈</th><th>밖대 과정</th><th>•••••</th><th>6</th><th>0</th></box>	1> EU 홈	밖대 과정	•••••	6	0
<box 4-<="" td=""><td>2> EU의</td><td>가입지원</td><td>프로그램</td><td>6</td><td>1</td></box>	2> EU의	가입지원	프로그램	6	1

제1장 서론

영국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한때 '영국병'의 진원지로서 경제성장의 반면 교사로 연구되었던 영국경제는 1993년 이후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여 마침내 2003년 현재 총 GDP 1조 8천억 달러,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후 유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체제의 상대적 저효율이 부각됨에 따라 영국경제는 서구사회에서조차 저성장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동안 영국경제는 전 세계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저성장, 저생산성, 그리고 파업과 비효율로 고통받는 노쇠한 경제권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영국경제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사회적 분열도 경험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한때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영국경제는 대체로 유로권 지역이나 일본보다 더 양호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역동적 선진경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그동안 IMF 구제금융, 극심한 파업과 비효율을 극복한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외환위기와 산업공동화의심각한 위험을 경험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영국의 사례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영국의 접촉과 교류는 200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우호조약을 맺은 이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수립도 121년에 달하는 유서깊은 역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오늘날 양국간의 교류는 빈번하고 다양하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보고서는 영국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과 영국간 경제 통상관계의 현안을 짚어보고자 집필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의 발전과정을 점검해보고 경제발전과정상의 주요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 석하며 이러한 분석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3장은 최신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최근 영국의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주요 혀안과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4장은 영국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영국과 유럽, 영 국과 유로화, 영국과 미국 등 주로 영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영국의 입장과 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주 소개되지 않았던 영국의 대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은 한국과 영국간 경제관계 및 통상현안을 정리함으로써 한・영 경제관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국경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한 · 영 경제관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2장 경제발전과정1)

1. 발전과정 개관

가.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영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1960년 이후 최근까지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0년 1,377달러로서 선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었던 영국의 1인당 경상 GDP는 1980년에 9,511달러까지 증가하여,여타 유럽국가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았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그 이후 7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못하고 횡보를 거듭하다가 1987년에야 비로소 1만 2,024달러로서 1만 달러를 돌파하였다.2) 이어서 9년만인 199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고, 2003년 현재 3만 165달러를 보이고 있다.

10년 단위로 볼 때에는 1960년대 평균성장률은 2.9%, 1970년대는 2.43%, 1980년대 평균성장률은 2.41%,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2.08%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돌파한 198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47%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¹⁾ 이 장의 상당 부분은 김흥종(2003)에 의존하고 있다.

^{2) 1}인당 소득의 이러한 추이는 <그림 2-1>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0년대 후반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국이 산유국이 된 이후 지속된 파운드화의 강세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로 자국화폐로 계산되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크게 떨어져 심각한 저성장의 국면에 돌입한다.

30,000 25,000 20,000 15,000

5,000

<그림 2-1> 1인당 소득의 연도별 추이
United Kingdom(Current US\$)

영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1인당 GDP가 3,476달러였던 1974년부터 1인당 GDP 9,031달러였던 1981년까지 평균성장률은 0.87%에 불과하여 극심한 저성장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이 거의 1만 달러에 육박한 1980년(1 인당 GDP 9,511달러)부터 1986년(1인당 GDP 9,845달러)까지 평균성장률도 1.77%에 불과하여 소득수준 3,500달러대에서 1만 달러를 달성한 1987년 전까지 상대적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다.3) 이와 같이 영국은 소득 1만 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극심한 저성장을 겪은 국가이다.

²97, ⁴⁸89, ⁴⁸89, ⁴⁸89, ⁴⁸8, ⁴⁸8, ⁴⁸8, ⁴89, ⁴89, ⁴89, ⁴81, ⁴81, ⁴81, ⁴81, ⁴81, ⁴89, ⁴89,

나. 경제발전 개관

18세기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은 19세기에 걸쳐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린 바 있다. 영국은 20세기 초반한때 전 세계 면적의 1/4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양차대전 중간기에도 세계

^{3) 1980}년대 초반 미 달러화의 강세로 1980년 달러당 0.43이었던 파운드화는 1985년 에 0.7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달러화 표시 1인당 GDP(그림 2-1)의 궤적은 실제성장률보다 더 심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역량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 전으로 초래된 엄청난 국력의 소모와 1945년 이후 잇따른 식민지의 독립, 영국경제의 활력의 둔화 등으로 영국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 였다.4)

2차대전 이후 최초로 원내 다수당으로 단독 집권했던 애틀리 노동당 정 권(1945~51년)은 전국민건강제도(NHS)의 전면적 실시와 같은 영국 복지국 가의 전형을 확립하였으며, 그 이후 번갈아가며 집권한 보수당과 노동당 정 부는 이 같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대체로 존중하였다. 역대 노동당 정권(1945~51년, 1964~70년, 1974~79년)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 화하여 석탄, 전력, 철강, 그리고 교통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였 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영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각계의 경고 에도 불구하고 전후 케인즈(Keynes)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1970 년대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위기와 노사관계의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영국경 제의 성장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양상이 표면화되었다. 1975년 부터 상업생산이 시작된 북해유전에도 불구하고 1976년 말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1979년 초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불만의 겨울 (Winter of Discontent)"을 겪게 되면서 노동당 정부의 신뢰는 극도로 저하된 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대처(Margaret Thatcher) 당수가 이끄는 보수당은 1979년 5월 선거에서 대승함으로써, 이후 18년에 걸친 보수당 집권기를 열 었다.

대처 총리의 보수당 정권은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경제에 국가 의 개입 축소, 경쟁도입, 그리고 건강 및 연금제도의 부분적 민영화를 단행 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⁴⁾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다가 그 이후 안정화되었다.

의존도가 높은 영국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동반불황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탄광노조의 파업분쇄, BT(영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개혁이 계속되었으며이러한 개혁과 전 세계적인 경기호황을 발판으로 1980년대 후반 영국경제는 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경제호황에 따른 그림자도 커져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뒤 이은 주식 및 부동산가격버블의 붕괴이 있었으며 영국경제는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0.35%의 성장정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2년 9월에는 외환위기까지 겪었다.

1993년 이후 2000년까지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 속에서 연평균 2.95%씩 경제가 성장하여, 유럽 대륙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고성장을 누렸다. 또 2.5%의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하회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였다. 실업률의 경우도 10.9%(1994년)에서 4.9%(2001년)로 떨어졌다.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금융정책위원회(MPC)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이자율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조처는 그 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환, 회사채 발권 및 인수, 주식, 역외금융, 파생상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산업과 비철금속 및 금 거래의 중심지이고, 2002년 현재 46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런던에 입주해 있어 프랑크푸르트나 뉴욕의 외국계 은행 수의 두 배가 넘고 있다. 유로화 출범 이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러한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달러-유로-엔-파운드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런던이 갖고 있는 금융제도, 인적 자원, 질높은 서비스가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레이져 연구소의 경제자유도 지수로 볼 때 영국은 1999년 현재 88점으

로 OECD 국가 중 2위이다. 이는 1970년에 19위, 1980년에 15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구조와 시장의 활용도는 13위(1980년)에서 3위(1999년)로 상승하였고, 법률적 구조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서는 14위(1980년)에서 1위(1999년)로 상승하였다. 자본과 금융시장 자유도는 7위(1980년)에서 1위(1999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영국경제의 부활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의 시행과 시장자유도의 획기적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한때 세계 6위까지 떨어졌던 영국의 총 GDP 규모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에 다음가는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연도별 주요 사건

영국은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인당 GDP가 5천 달러(1978년)에서 1만 달러(1987년)를 돌파할 때까지 9년의 시한이 소요 됨으로써 네덜란드(4년), 룩셈부르크(5년), 스위스(5년), 스웨덴(5년), 덴마크 (5년), 핀란드(6년), 그리고 포르투갈(7년)보다도 오래 걸렸으며, 저성장으로 유명하였던 아일랜드(9년)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중 제2차석유위기(1979년) 및 세계경제의 불황(1980년 전후)이 있었지만, 이와 함께 노사갈등과 연이은 파업사태, 대처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계층간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1만 달러로 가는 과정상의 주요 대외적 사건으로는 제2차 석유파동과 전세계 동반불황, 포클랜드 전쟁 등이며, 대내적 도전으로는 대처리즘 도입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극대화가 있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직접적 극복요인으로는 보수당 정권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간접적 극복요인으로는 1982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회복을 들 수 있다.

<표 2-1> 연도별 주요 시간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인당 GDP	3,476	4,151	3,993	4,516	5,728	7,434	9,511
성장률	-1.7	-0.7	2.8	2.4	3.4	2.7	-2.2
주요 사건	1차석유 위기, 노동당 집권	북해 유전 상업 생산			세계 경기 호황	불만의 겨 울, 보수당 (대처) 집권	2차 석유위기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9,031	8,590	8,136	7,630	8,045	9,845	12,024	14,557
-1.3	1.8	3.7	2.4	3.8	4.2	4.4	5.2
달러화 강세	포클랜드 전쟁	보수당, 총 선 압승(대 처2기)	탄광 노조, 파업 돌입	탄광노조 파업 종료, 달러화 약 세로 반전		세계 경기 호황, 보수 당 총선 승리 (대처 3기)	경기호황 지속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4,642	17,158	17,833	18,401	16,479	17,758	19,226	20,060
2.1	0.7	-1.5	0.1	2.3	4.4	2.8	2.6
경기침체 시작, 버블 붕괴 조짐	영국 ERM 가입, 대처 실각, 메이 저 승계	버블 후유	보수당 4기 연속 집권, 파운드화 에 대한 공격, 영국 ERM 탈퇴	후 해외수 요 급증으 로 경기	블레어, 노 동당 당수 취임	영 국 경 제 호황 지속	

1만 달러 달성 이후 2만 달러를 돌파하기까지는 9년이 소요되었다. 이는 싱가포르(5년), 일본(6년), 아일랜드(8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위스, 덴마크와 비슷하고, 룩셈부르크(10년), 스웨덴(11년), 네덜란드(13년)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중 버블의 붕괴로 인한 후유증과 국제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영국의 ERM 탈퇴 등의 돌발사태가 있었으나, 대처 집

권시 시작한 개혁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2만 달러로 가는 과정상의 주요 대외적 사건으로는 1990년 전후의 미국불황,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ERM 탈퇴가 있었으며, 대내적도전으로는 자산,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해 민간부채 급증을 비롯한 후유증, 정부재정 적자의 급증(1993년)이 있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직접적 극복요인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그 효과, 그리고 간접적 극복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수출수요의 급증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

경제발전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한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국 경제의 재생요인을 정치적 리더십,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의 제고, 노사 관계,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기업의 글로벌 역량의 강화, 고급인력의 양 성,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치적 리더십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총리는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독특한 국가경영이념을 기반으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쳤다. 1975년에 보수당의 당수로 취임하고 1979년 총선 승리로 총리가 된 대처 총리는 community charge의 도입, 유럽과의 관계 문제로 촉발된 사회불안과 보수당내부의 반발로 인해 실각할 때까지 11년 동안 강력한 추진력으로 영국경제를 개혁하였다.

1974년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1964년 이래 5번의 총선에서 불과 한번밖 에 승리하지 못한 보수당은 1979년 이후 네 번 연속 승리하였으며 그 중심 에는 대처리즘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처리즘은 보통 영국병 치유책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자유시장주의의 표방, 공공지출 억제 및 공급측 경제학 수용, 세제개편을 통한 개인 기업활동의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되고, 대외적으로는 대서양관계(Transatlantic relations) 중시, 대외관계에 서의 영국 국익의 적극적 옹호로 나타났다. 대처리즘은 2차대전 이후 케인 즈주의의 득세에 따라 보수당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회민주주 의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더글러스 히스 보수당 정권의 우유부단 한 산업정책과 친유럽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5)

1979년 집권하자마자 2차 유가인상을 겪으면서 대처 정부는 반인플레이 션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엄격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하 였으며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해서 조세부담 경감, 복지 축소가 단행되었다. 한편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 크루즈 미사일 배치 등 많은 부문에서 대처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대처 1기(1979~83년) 의 경제정책이 대처리즘의 주요 특징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경기침체, 산 업불안 등으로 그 이전 정부와 크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하였 다.6 즉 대처 1기 정부는 노사관계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 공기업 노조 만을 주요 목표로 하여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문에만 개입하였다. 따라서 1981년에 강력한 탄광노조의 부분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정부는 순순

⁵⁾ 대처의 정책은 많은 경우 그의 선배 보수당 의원이던 키스 조셉(Keith Joseph)과 그가 운영하던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Studies)에서 나왔다. 당초 많은 사 람은 대처와 키스 조셉의 주장이 너무 과격해 보여서 단지 선거용일 뿐 현실화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⁶⁾ 대처 1기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강력한 실행을 고 집하지 않았던 것은 이 시기 세계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대처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보수당 내부에서조차도 대 처의 입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 양보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도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1980년 BP(영국가스공사)의 정부지분도 단지 5%만을 매각함으로써 당 초 강력한 민영화를 예상하였던 대다수 국민의 예상보다 훨씬 완화된 정책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2년 6월에 발발한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은 대 처 정부에 큰 기회로 다가왔다. 영국의 일방적인 승리 이후 대처는 처칠 이 후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로 대서양 관계 를 중시한 대처의 정책이 평가받았다. 대처는 대중 일반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에 크게 고무된 대처는 1983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였다. 선거에서 보수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1983년 이후 본격화된 세 계경제의 회복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나. 주로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 때문이었다.

대처 2기(1983~87년)는 영국 및 세계경기의 회복기로서 대처 정부의 전 성기이자 대처리즘이 대내외로 각인된 시기였다. 우선 경제가 안정을 찾아 가자 대처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반인플레이션정책에서 성장잠재력 확 충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기업 살리기를 위한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부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대처 1기에 실행하지 못했던 지방 재정 삭감을 통한 지방정부 무력화와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추진하 였다.

산업합리화정책의 성공 여부는 탄광폐쇄추진정책이 분수령이 되었다. 1981년 한때 순순히 탄광노조에 양보한 이후 대처 정부는 치밀한 준비로 탄 광폐쇄를 준비하였다.7) 탄광노조의 파업은 1984년 3월에 시작하여 11개월

⁷⁾ 발전용 석탄의 재고를 확충하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에 비상경계 령을 내리고, 정부는 비상시 대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국영탄광의 개혁을 위해 충실한 대처주의자(Thatcherite)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정부는 노조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을 끌었으며, 정부는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나 노조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탄광노조 파업을 분쇄한 이후 대처 정부는 산업합리화의 추진 동력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1987년까지 BT(British Telecom), BG(British Gas), BA(British Airways) 등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연이은 성공으로 대처는 국제적 인물로 부상하였고 대처리즘이라는 하나의 정치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처 3기(1987~90년)는 계속 비타협적인 정책을 추구한 대처 정부가 대 내외의 변화된 환경변화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대처 자신과 보수 당의 지위가 흔들려 마침내 1990년 11월 총리직을 내놓을 때까지를 말한다. 1987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처 정부는 1988년 예산에서 개인소득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세목의 세율을 삭감하였으며 광범위한 금융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7년 10월 미 주식시장 폭락사태로 야기된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해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미 과열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정책적 실수를 범하였다.

1989년부터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수당 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첫째,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지방세(Community Charge) 8)의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대중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1989 년부터 본격화된 경기후퇴가 그 두 번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대처의 실 각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유럽에 대한 대처의 대안 없는 혐오에 대 한 보수당 내부의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1990년 11월 보수당내 1차 당권투 표에서 마이클 헤젤타인의 도전을 가까스로 물리친 대처는 2차 투표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자 스스로 당수직을 내 놓고 자신의 심복이자 재무장관이 었던 존 메이저(John Major)를 후임 당수로 지명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 유 지와 대처리즘의 계승을 추구하였다.

대처리즘은 대처 이후에도 영국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90년 총리

⁸⁾ 지방정부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하려는 조세제 도로서 인구 수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 인두세(poll tax)라고도 불리었다.

직을 승계한 메이저는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對EU 관계, 주민세, 사회보장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1992년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1992년 9월의 외환위기와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 보수당 내부의 연이은 추문과 분열등으로 보수당의 인기는 크게 떨어져 있었다. 반면 노동당은 1994년 스미스당시 당수의 급작스런 사망의 위기 속에서 41세의 새로운 지도자 토니 블레어(Tony Blair)를 내세워 노동당의 우경화와 연성화를 지속하였다.

노동당은 1997년 선거에서 대승하여 1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워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한다는 중도적 방향을 주장하였다. 블레어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거리유지, 엄격한 예산집행, 물가안정, 그리고 사유화정책의 유지를 추구함으로써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으나,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도입(1999년), 반경쟁·독과점 금지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새로운 사회연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9

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의 제고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세제개혁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말한때 83%에 달했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대처 정부가 들어선 뒤 점진적으로 낮아져 1988년에 40%로 낮아졌으며, 최저세율도 같은 기간에 33%에서 25%로 낮아졌다. 법인세의 경우도 1979년에 42%에 달했으나 1984년에는 30%로 낮아졌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낮은 세율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

⁹⁾ 이와 같이 대처리즘은 대처의 실각 이후에도 그 역사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처리즘의 주요 내용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이미 다른 정치가나 정권에서도 주장된 바 있어 일견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적 방안을 현실화시켰다는 데 대처리즘의 차 별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원을 확대시켜 종국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공급측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대처 정부는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 개혁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현금지출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간접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개혁을 단행하여 지방정부의 징세기능과 의사결정권한을 중앙으로 양도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압박은 권한, 재정, 기능의중앙집권화를 낳았다.

흔히 대처리즘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영화는 당초 1979년 보수당의 정책선언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대처 1기 공기업정책에서의 혼선을 거치면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영화가 대처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자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가 보다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실 공기업을 정부가 리스트럭처링하여 매력 있는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개혁이 진행되었다.10)

또한 해외자본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국내경쟁을 유도하였다. 흔히 영국은 해외자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다. 영국 현지정보가 어두운 해외자본에는 각 지방의 개발청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국내자본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외자본을 국내자본보다 더 우대해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국내자본은 해외자본과의 노출을 통해 항상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 반

¹⁰⁾ 주요 민영화 실적으로는, British Petroleum(1979~87년), British Aerospace(1981년), Jaguar(1984년), British Telecom(1984년, 1993년, 부분매각), British Gas(1986년), Rolls-Royce(1987년, 항공엔진분야), Rover Group(1988년), 철도관리 및 운영(1996~97년), British Energy(1996년, 원자력발전부문) 등이다.

면, 해외자본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편승하는 이익도 누리고 있다. 현재 영국은 부총리 산하에 규제완화 전담반을 운영하여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당이 대처리즘과 차별화되는 것은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블레어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는 과거 대처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경감, 재정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도하도록 산업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특히소프트웨어분야 신생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노사관계

영국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강력했으며 노동운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노사분규를 보면 1인당 소득 1만 달러 지점까지 접근한 1980년까지 노사분 규가 가장 극심하였다. 노조조직률에서도 영국은 45%(1970년), 51%(1980년), 그리고 41%(1988년)로서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 한때 한해 3천 건에 육박하였던 노사분규 수는 대처 집권 이후인 1980년대에 들어와 1천건 내외로 급감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1년에 500건 이하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처 정부의 강력한 노동조합 무력화정책이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환경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노동조합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 때문에 노동당은 노동조합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대의원의 일정 부분은 항상 노동조합에 할 당되었다. 그러나 블레어가 이끄는 신노동당은 노동당 당규 4조를 철폐하여 노동조합총연맹과 공식적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는 개 혁을 단행하였다.

노사관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즈주의의 전통과 2차대전 이후 집권한 애틀리 노동당 정권의 사회보장 개혁에 의해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42년에 발간된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전 국민의료체계(NHS)의 도입, 국민연금 재정비, 세제개편(누진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 체계는 1950~60년대 보수당집권기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철강산업의 민영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노사관계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파업이 빈발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 파업건수는 2,832건을 기록하였으며 1970년에는 3,906건에 달하였다. 반면 실업률은 1~2%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1946~76년 동안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 수에서 영국은 213일을 기록하여 프랑스의 566일, 이탈리아의 631일 그리고 핀란드의 630일에 비해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경제상황이어려워지자 노사분규는 더욱 격화되었다. 1973년의 유가인상은 경제활력이떨어지는 영국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행위는 더욱 심해졌고,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매년 2천 건 이상의 파업이 보고되었다.

1979년 초 공공부문 노조의 전면파업은 국가 전체를 완전 마비로 몰아가, 1979년의 경우 노동손실일 수는 거의 3만 일에 달하여 1984년 탄광노조의 파업 때보다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파업 및 국가위기사태는 영국 사회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중도파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이러한 커다란 표심의 이동(big swing)은 1976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자유당과의 정책연합으로 간신히 지탱해오고 있던 노동 당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80년대는 노조의 극한 투쟁과 패퇴로 특징지워진다. 대처 보수당 정부수립 후에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긴장관계에 돌입하였다. 1980년, 1982년과 1984년 대처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고 파업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11)

대처 정부의 치밀하게 준비한 노조와의 대결이 1984년 탄광노조의 파업 분쇄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명난 후에도 1986~87년 인쇄노조 파업, 1986~87년 교원노조 파업 등 1987년까지 단위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계속되었다.12) 그러나 이 시기 노동조합총연맹(TUC)은 정부정책 결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으며 대처 정부는 여러 번 노조 없는 기업, 또는 무파업선언(no-strike agreements)한 단수노조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실제로 무노조 기업이 많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들어와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가 완전히 정착하였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노사분규는 연 200건 이하로 급감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확산은 단체협약보다는 개별협약에 의존하는 관행을 더욱 확산시켰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대폭 신장되었다.

^{11) 1}차 고용법 개정(1980년): Closed shop 채택시 비밀투표 의무화, 2차 피케팅 불법화,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2차 고용법 개정(1982년): Closed shop 유지 여부를 5년마다 비밀투표로 결정, 합법적인 노사분 규를 명문화함, 정치적 파업, 노동자집단간 분규, 노동조합 상호간 분규에는 노조간부의 면책특권을 불인정함. 3차 고용법 개정(1984년):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경우에만 노조의 면책특권 인정, 노조간부는 매 5년마다 조합원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 노조 조합원의 엄격한 관리, 10년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정치기금 사용 여부 결정

¹²⁾ 인쇄노조는 1983년에도 대규모 파업을 한 바 있다.

라.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영국에서 성장동력의 발굴은 기존 제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금융산업에서의 규제완화로 특징지워진다. 먼저 제조업의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하였다. 영국에서 제조업의 위상은 날로 줄었다. 1979년과 1986년사이 영국의 제조업 고용은 28% 감소하여 200만 명이 줄어들었으며, 1979년에서 81년사이 제조업 생산액은 14% 감소하였으며 1987년에 가서야 197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제조업부문의 교역수지는 1978년의 경우 50억달러 흑자에서 1986년에는 54억 달러 적자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지구 (enterprise zones)의 도입, 자유항(freeports)의 설치, 그리고 제조업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나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적 분위기를 제고시켰으며, 무기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1986년의 경우 정부가지원하는 R&D 자금의 52%가 방위산업에 할당되기도 하였다.

2003년 현재 제조업의 GDP 비중은 16.3%이며, 고용인원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생산기여도가 높아 영국제조업의 1/4을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화학, 플라스틱, 제약, 전자,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제지, 인쇄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통상 정책도 이 업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맞춰져 있다.

또 다른 정책방향은 금융산업을 자유화시킨 것이다. 과거 세계 금융을 주도했던 영국의 금융산업은 대처 정부 시절 본격적인 성장세를 맞게 되었다. 1979년에 대처 정부는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1986년에는 소위 '빅뱅(Big-Bang)'으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빅뱅을 통해서 영국계 투자은행들은 미국 중심의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인수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런던 금융시장은 더욱 발달하였다. 영국 정부

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자유화를 통해 런던을 국제금융 시장의 중심지로 만들어갔다.

1998년 기준으로 금융서비스업은 총부가가치의 23.7%를 차지하며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영국산업의 최대의 원동력이다. 현재 런던 금융시장은 세계 3대 금융시장으로서 유럽 제1의 금융시장이다. 세계 외환거래액의 32%, 국제 주식거래의 59%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펀드매니지먼트 센터가 소재하고 기관투자가의 주식 보유액이 1조 8천 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종합금융센터이다.

영국의 금융산업은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된 영란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더욱 탄탄한 배경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이자율 결정은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마.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영국 정부는 영국경제를 전면 개방하고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버(Rover)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팔려나갔으나 대외개방정책과 적극적 기업 인수·합병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영국 정부는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한 환율관리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다.

영국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임에 따라 1988년부터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또는 EU의 생산제품을 수출 후 재수

입하거나 영국에 일시 수입된 후 다시 수출될 물품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상용이 아닌 연구용, 자선구호용, 개인소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의 면제를 통해 연구 및 자선구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 다. 영국 정부는 선전적 검사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으며, 모든 선적전 검사 제도는 교역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영국 정부 는 WTO 및 EC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수입량 제한을 철폐하였다.13)

바 고급인력의 양성

지난 2000년 OECD가 시행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력검정시험에서 영국은 조사대상 32개국 중 8위를 차지함으 로써 우수한 인력 양성에 성공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유럽 OECD 국 가 중에서는 핀란드 다음으로 우수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우수 등 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급인력 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

그러나 영국의 교육제도가 과거에도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과거 노동당 정부의 교육개혁은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1960년 대 윌슨 노동당 정부는 11세 때 인문과 실업교육으로 구분되는 진학제도의 비인도성을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우수한 공립학교인 그래머스쿨 (Grammer School)을 폐쇄시키고 수많은 일반학교(Comprehensive School)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나타났으 며 등록금이 매우 비싼 귀족적인 사립학교(Public School)의 상급학교 진학

¹³⁾ 다자간 섬유협정(MFA)하에서 의류 및 직물류, 수출 자율규제 협정에 의한 일부 철강제품에 수량제한을 가하고 있다.

¹⁴⁾ 반면 학생들간 수준차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의 결과는 한국의 성적 이 전체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중간계층이 많고 최우수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과 대비된다.

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잘못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대처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대학간 경쟁, 주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감축,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은 대학사회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오늘날 정착된 대학 및 학과별 평가, 공개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980년 정부는 국가직업훈련자격증제도(NVQ)를 정비하고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kills)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에서 기술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노동의 질 상승률에서 영국은 1980년 이전에 매년 0.23% 상승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에는 0.8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독일(0.49~0.21%), 미국(0.33~0.39%)과 대비된다.

1980년대 영국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학졸업자를 비롯한 우수한 고급인력이 적다는 것이었다. 1987년 영국의 의무교육 이수자는 전체의 56.2%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중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83%,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22%로서 여타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15)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미국의 60%, 캐나다의 58%, 핀란드 38%, 노르웨이 35%에 크게 뒤지고 있었다. 이는 1970~80년대 영국 정부가 고등교육 육성정책에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면서 기술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대처의 교육개혁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1990년대의 교육정책방향은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들어와 영국 정부는 대학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

^{15) 1965}년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은 중등교육 이수자와 대학교육 이수자가 각각 66%와 12%로서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국가들보다는 낮으나 유럽국가 중에서 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을 기울였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교육문제를 현안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고급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말에 와서는 미국 다음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 기도 하였다. 대학간 경쟁, 학과간 경쟁, 과학 및 기술교육의 중시, 평생교육 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학생간, 대학간 격차의 확대가 문제로 지 적되기도 한다.

사 외자 유치

영국은 정치적 안정, 큰 내수시장, 세계금융중심지로서 금융조달의 편의 성, 영어사용국, 각종 투자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유럽에서 외국인투자가 가 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우편,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우수 하며, 임금은 독일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부지가격도 저 렴하며, 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간소한 행정규제와 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 등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6)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내국인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도 없다. 그 리하여 현재 3천 개의 미국업체, 1천 개의 독일업체, 200개의 일본업체가 진 출해 있으며 120여 개의 한국업체도 현지 진출해 있다.

영국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는 통상산업부(DTI)내에 있 는 대영투자국(Investment in Britain Bureau: IBB)이다. IBB는 1977년에 설립

¹⁶⁾ 국가차원의 투자보조금제도의 운영으로 자본비용의 평균 15% 수혜가 가능하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50%). 금융 알선, 중소기업 우대조항이 있다. 법인세율도 31%와 21%(중소기업)에 불과하며, 과학 연구,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지출금의 100% 세금 공제, 이중과세 방지, 투자설비 기계류 구입비용에 대해 연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제도에 의거,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인센 티브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된다.

되었으며 정책과, 홍보과, 5개 해외지역과 등 8개과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IBB의 주요 업무는 해외투자사절단의 구성 및 안내, 투자 최적지 안내, 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국가 및 각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 교육훈련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안내,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접촉 주선, 해외투자유치활동 등이며, 해외지원기구로 IBB 뉴욕사무소와 외무부해외공관 상무조직을 운영 중이다.

IBB와는 별도로 지방정부마다 투자유치기관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 11개의 개발청(Development Agencies)이 설립되어 경쟁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개발청은 독자적인 해외운영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WDA(Welsh Development Agency)의 경우 일본, 한국, 대만에 3개, LIS(Locate in Scotland)는 미국, 한국 등 11개, IDB(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 Northern Ireland) 7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우수한 투자여건에 따라 1990년 이후 영국은 매년 200억~1,166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왔다. 총해외투자의 80% 이상은 EU 국가로부터이다. 주된 투자국가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이다. 한편 영국의 해외투자규모는 투자 유치액을 상회하여 같은 기간에 250억~2,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처리즘은 전후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온 경제사상과 체제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탄광노조와의 대치상황에서 대처 정부가 보여준 각종 조치

를 볼 때, 개별 이해집단의 요구를 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와 더불어 치밀한 준비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실용주의적인 정책 운용으로 보수당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쟁적 경제체제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또 기업활력 제고는 단순한 세율인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조세 규 제완화를 통한 기업비용 감소, 공기업 민영화 등 다면적 방식을 사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자본의 내국민대우는 어느 한쪽 이 특혜를 받지 않는 엄격한 기준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960~70년대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지원의 그래머스쿨의 폐지가 결과적으로 부유층 위주의 사립학교 출신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였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는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 대학간 경쟁을 도입함으로써고급인력 공급체계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초기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금융감독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영국의 사례는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최근 경제현안

1. 최근 경제동향

1992년 말부터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영국경제는 1993년부터 오랫동안 경기호황을 누리게 된다. 1993~94년 회복기 당시 처음엔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내수가 확대되면서 그 후 민간소비는 영국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17 1997~2001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에 달하여 같은 기간 유로지역(Euro-zone)18)의 2.7%를 상회하였다. 동 기간 영국의 경기호황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총 250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직장을 얻었으며, 1993년 10%를 넘었던 실업률도 2003년에는 5%까지 하락하였다. 게다가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정부 목표치인 2.0% 이하로 유지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제가침체기에 있던 2001~02년 당시에도 영국은 2002년에 1.8%, 2003년에는 2.2% 성장하여 2003년 유로지역과 EU-15의 성장률 0.6%, 0.9%와 비교해 볼때 2~4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긴 호황기 속에서 영국경제는 국내수요와 해외분야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7~2002년간 민간소비지출은 확대되어 실질 GDP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였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였다. 한편 세계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영국

^{17) 2003}년 기준으로 영국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를 초과한다.

¹⁸⁾ 유로지역(Euro-zone) 회원국은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오 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등 12개국이다. 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 서비스산업은 꾸준히 성장한 반면, 수출주도형 제조업부문은 2001~03년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급감으로 상당히 고통스런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내수증대 및 수출감소의 불균형은 영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까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국은 서비스무역(무역외수지)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를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어 영국의 경상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1999년 395억 달러의경상수지는 점차 줄어들어 2002년에는 274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03년 들어 다시 확대되어 33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 달러에 대한파운드화는 2001년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강세로 돌아서 2001년에는 1달러당 0.69파운드, 2002년 0.67파운드, 2003년 0.61파운드로 미국의 달

지금까지는 영국의 경제현황을 종합적이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분야별로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러화 약세 정책이 계속되면서 파운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3-1> 주요 경제지표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인 구	백만 명	59.2	59.4	59.5	59.6	59.7
GDP(명목)	십억 달러	1,462	1,439	1,433	1,570	1,801
1인당 GDP(명목)	달러	24,681	24,248	24,098	26,346	30,165
경제성장률	%	2.9	3.9	2.3	1.8	2.2
실업률	%	6.0	5.5	5.1	5.2	5.0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0.8	1.2	1.3	1.4
재정수지(GDP 대비)	%	1.1	1.6	0.8	-1.7	-3.5
수 출	십억 달러	268.9	284.6	273.9	280.3	307.8
수 입	십억 달러	315.9	334.5	332.5	350.7	385.2
경상수지	십억 달러	-39.5	-36.5	-32.7	-27.4	-33.4
환율(연평균)	파운드/달러	0.62	0.66	0.69	0.67	0.61

자료: Global Insight(2004); EIU(2004c).

가. 경제성장

세계경제 및 유럽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던 2002년 1.8% 성장에 그쳤던 영국경제는 2003년에는 2.2% 성장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03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2% 성장하여 초기에는 성장속도가 미약하였으나 회복세가 점차가속화되어 2/4분기에는 0.7%, 3/4분기 0.9%로 성장한 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0% 성장함으로써 2000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4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져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7%, 2/4분기에는 0.9% 성장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로 보면 2003년 4/4분기 2.9%, 2004년 1/4분기 3.4%, 2/4분기 3.6%로 그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져 2000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도 영국은 유로지역(Euro-zone) 12개 회원국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유로지역의 2003년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5%인 반면 영국은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은 0.9%였으며, 2004년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4년 2/4분기까지 영국은 유로지역보다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로 보면, 2003년 하반기에는 영국이유로지역보다 네 배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인 후 2004년 들어 점차 영국과유로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영국경제는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의 경제대국보다도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다. 2003년 하반기에는 영국과 두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2004년에 들어서 그 격차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2004년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그동안 침체기에 있던 유로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경제대국들과 유로지역 경제는 영국의 성장속도를 앞지르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04년

1/4분기와 2/4분기 영국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4%, 3.6% 등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5.0%, 4.8%, 일본은 5.1%, 4.3%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표 3-2> 영국 및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률

(단위: %)

	전기대비 GDP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			
	20	003 2004		04	2003		2004	
	Q3	Q4	Q1	Q2	Q3	Q4	Q1	Q2
영국	0.9	1.0	0.7	0.9	2.2	2.9	3.4	3.6
독일	0.3	0.3	0.4	0.5	-0.3	0.0	0.8	1.5
프랑스	0.7	0.5	0.8	0.7	0.4	1.0	1.6	2.8
Euro-zone	0.5	0.4	0.7	0.5	0.4	0.7	1.4	2.0
미국	1.8	1.0	1.1	0.8	3.5	4.4	5.0	4.8
일본	0.6	1.9	1.6	0.3	1.8	3.5	5.1	4.3

자료: Eurostat(2004b)

1996년 이후 영국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영국 GDP의 약 2/3을 구성하고 있는 가계소비가 담당해왔다. 영국 노동자들의 높은 취업률 과 임금의 증가, 그리고 주택가격 급상승에 따른 대출증가 등으로 가계소비 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기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과열양 상을 보이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경기 경착륙(hard-landing)을 우려한 영 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은 2003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른다.19) 그 후 가계소비는 다소 누그러져 2004년 1/4분기에 1.2%나 증가했으나 2/4분기에는 0.6% 증가에 그쳤다. 한편 정부소비도 영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여 2003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4/4분기 에는 2.1%나 증가한 후 점차 증가세가 완화되어 2/4분기에는 0.4% 증가하였

¹⁹⁾ 영란은행은 3.5%였던 기준금리를 2003년 11월 이후 0.25% 포인트씩 다섯 차례 모두 1.25% 포인트 인상하여 2004년 10월 현재 기준금리는 4.75%를 유지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정부소비 증가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약속한 현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가운데 특히 보건 및 교육부문에 정부지출이 증 가하였다. 또한 기업투자, 특히 서비스부문의 투자증가도 영국경제 성장의 주요한 견인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업투자의 강세는 2004년 상반기에 영국경 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2004년 1/4분기 전기대비 1.6%(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던 투자부문은 2/4분기에 전기대비 2.4%, 전년동기대비로는 7.3%나 확대되었다. 투자부문의 강세는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두드러졌다. 2003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서비스부문은 2004년 2/4분기에는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로는 7.5%) 증가하였다. 또한 2001 ~03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2004년 1/4분기에도 1.6% 감소하였던 제조업부문 의 투자가 2/4분기에는 플러스로 반전되어 전기대비 3.6% 증가하였다. 그러 나 제조업부문 투자의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4%에 불과하며 실 질적으로는 2000년 2/4분기에 비하여 20%나 낮은 수준에 있다.

<표 3-3>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 %)

					(4 1)	- 1 11 15 70)
		20	03		2004	
	Q1	Q2	Q3	Q4	Q1	Q2
실질 GDP	0.2	0.7	0.9	1.0	0.7	0.9
결결 GDP	(1.8)	(2.1)	(2.2)	(2.9)	(3.4)	(3.6)
가계소비	-0.1	0.9	0.8	0.6	1.2	0.6
정부소비	1.1	0.7	1.6	2.1	0.8	0.4
 투 자	-2.2	0.9	1.1	1.9	1.6	2.4
국내수요	-0.3	0.2	1.3	1.5	1.0	0.8
수 출	4.7	-2.2	0.2	1.6	-1.0	1.5
수 입	2.3	-3.3	1.4	3.1	0.3	1.1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Global Insight(2004)

영국의 2004년 3/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전분기대비 0.4%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영국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 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10월 23일,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영 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정치는 0.4%로, 2/4분기 성장률 0.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이다. 그러나 3/4분기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의 당초 2004년도 목표 성장대인 3~3.25%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5년 경제성장률은 2004년보다 더 낮은 약 2.5~2.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민간 예측기 관과 마찬가지로 영국 재무부 측도 2005년도에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 망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경제가 둔화라고는 볼 수 있으나, 불경기로 돌아선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전반적인 성장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영국의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전분기대비 0.4%에 그침으로써 2004년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4분기 성장률 둔화로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는 당초 2004년내 추가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5%대의 이자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해 적어도 2005년 2월까지는 현행 4.75%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3-4> 예측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예측기관	2004	2005	2006
EU 집행위원회	3.3	2.8	2.8
Global Insight	3.2	2.6	2.4
EIU	3.2	2.5	2.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Global Insight(2004); EIU(2004c).

나. 실업률

영국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993~2004년 중반까지 약 250만 명의 신규취업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취업률 중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 여성근로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 10.2%까지 이르렀던 실업률은 2003년에는 5.0%까지하락하였으며, 실업수당 청구율도 1996년 7.1%에서 2003년에는 3.1%로 급감하였다. 2004년 들어서도 실업률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4.7%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9월 실업수당청구권 수는 83만 4천 건으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율도 2.7%로 1975년 7월 이후 29년 만에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렇듯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6~8월간 영국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증가율(보너스 제외)은 4.3%로 200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근로자들의 소득증대는 내수확대로 이어져 영국경제 성장의 가장 주요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3-5>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200	200	4년		
	Q1	Q2	Q3	Q4	Q1	Q2
실업률	5.1	5.0	5.0	4.9	4.7	4.8
실업수당 청구율	3.1	3.1	3.1	3.0	2.9	2.7

자료: EIU(2004c)

당분간 영국 실업률은 안정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3/4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영국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공공부문 취업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되며, 서비스부문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물가

영국경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겪은 바가 있다. 1980년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 을 초과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고인플 레이션 현상은 1980년대 말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금융정책을 통해 억제되 었으며, 1990년대 초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 후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두드 러지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이후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부목 표치내에서 유지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유로지역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최근 물가동향은 두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 번째는 1998년 이후부터 재화와 서비스부문의 물가상승률 격차가 더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물가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 상 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2000~03년 대다수 재화부문(특히 의류, 신발,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물가는 하락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파운드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어 수입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꾸준한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 다. 영국의 물가상승률(EU의 HICP 기준)은 2004년 1/4분기에는 1.3%, 2/4분 기는 1.4%를 기록하였으며, 7~8월에도 1.4%를 유지하여 정부당국의 중기(2 년)목표치인 2.0%를 밑돌고 있다. 더욱이 영란은행이 2003년 11월 이후 다 섯 차례의 금리인상조치를 취할 때에도 영국 물가상승률은 중기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20) 최근 유가상승이 영국의 소비자물가

^{20) 2003}년 3/4분기~2004년 2/4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은 1.3~1.4%를 유지하고 있다.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의류 및 신발21) 등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상악화로 의류 및 신발 소매업자들 이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제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 결과 8월의 의류 및 신발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7%나 하락하였다. 또한 장난감과 오디오 및 비 디오 등도 저렴한 아시아제품(특히 중국)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가격하락 압 력을 받아 수년간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상승은 생산자가 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점차 소비자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1.4%대를 유지 하다가 2005년에는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0%대를 약간 밑도는 수준인 1.8%, 2006년에는 1.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대외무역

영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EU-1522)로, 2003년 기준으로 영국 총수출액의 약 56%, 총수입액의 55%를 EU-15가 점유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에서 영 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총수출액의 약 11.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10.0%), 네덜란드(7.2%) 순이다. 그러나 단일국가로 보면 미국이 영국 총수출액 가운데 약 15.4%를 차지하여 1위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영국 총수입액의 9.7% 점유)은 독일(14.1%) 다음으로 영국의 최 대 수입대상국이다. 영국의 무역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영국은 정치외교 • 안 보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¹⁾ 의류 및 신발가격은 소비자물가에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²²⁾ 여기서 EU-15는 2004년 5월에 신규가입한 중동구 10개국을 제외한 기존 15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단위: 백만 유로)

				(=	11. 16 1132)
수 출				수 입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EU-15	174,297	151,146	EU-15	192,556	182,366
독일	34,409	29,253	독일	48,771	47,279
프랑스	29,476	26,603	프랑스	30,059	28,179
네덜란드	21,923	19,121	네덜란드	24,124	22,247
아일랜드	25,155	18,150	벨기에	18,587	17,412
벨기에	15,833	15,494	이탈리아	17,197	16,710
미국	44,390	40,424	미국	44,091	36,202
일본	5,761	5,437	중국	16,811	17,281
캐나다	5,014	4,701	일본	13,303	12,476
총수출액	296,315	268,890	총수입액	366,240	344,720

<표 3-6>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자료: Eurostat(2004a)

<표 3-7>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그성포무(green 기조)	수	출	수 입	
교역품목(SITC 기준)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0. 식품 및 산동물	9,038	9,208	24,561	24,448
1. 음료 및 담배	6,710	6,213	5,489	5,319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4,198	4,401	9,409	8,690
3. 에너지	24,085	22,419	15,139	16,073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334	373	929	962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45,023	45,022	39,125	38,431
6. 재료별 제조제품	34,383	32,812	46,927	43,787
7. 기계 및 운수장비	134,999	114,084	155,033	141,743
8. 기타 제조제품	34,664	32,070	58,548	54,430
9. 기타	2,881	2,289	11,079	10,838
합계	296,315	268,890	366,240	344,720

자료: Eurostat(2004a)

영국의 무역수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은 무역적 자가 심화되고 있다. 1997년에는 119억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3년 에는 무려 460억 파운드로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은 급감하는 반면, 소비증가에 따른 내수확대로 수입은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23) 영국의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의류 및 신발, 전자기계류, 자동차24)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 의약품 등의 화학 제품, 담배, 위스키, 기계제품 등이다.

마. 투자

영국은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자본수출국(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 자)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하반기까지 영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미 국 및 일본과 대등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초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한 후 1993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무려 약 2,497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FDI)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EU가 유로화를 도입한 이 후 영국의 FDI 유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 1,304억 달러에 달했 던 FDI 유입액이 2003년에는 145억 달러로 급감한 것이다.

물론 세계 총 FDI도 2000년에 정점에 이른 후에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전세계 FDI는 2000년과 비교할 때 60%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FDI 유입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라고만 이 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국 FDI 유입이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3) 2003}년 무역적자액는 GDP의 약 4.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²⁴⁾ 현재 영국에는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 생산공장들이 있지만 생산품의 대부분을 EU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표 3-8>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해외직접투자(ODI)	61,590	122,820	207,235	249,783	68,037	39,703
외국인직접투자(FDI)	33,229	74,324	84,238	130,422	61,958	24,945

자료: UNCTAD(2003)

을 보게 되면, 1998년에는 EU 전체 중 28.7%를 기록할 만큼 영국은 FDI 유치 강국이었으나, 그 후 5년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불과 5.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행한 보고서 World Investment Prospects 2004에 따르면, 영국 FDI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영국이 유럽경제통화연맹(EMU)에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래 영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적인 정부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최첨단 금융산업의 발전, 세계 비즈니스의 주요 언어인 영어 사용 등 FDI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영국의 EMU 미가입은 기업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FDI 유치국으로서의 영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FDI 유입이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EU 회원국이면서 EM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으로의 FDI 유입액이 1998년에는 EU 전체 중 약 40%에 달하였으나 2003년에는 약 8%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이 3개국은 FDI를 유치하기에 매우 우수한 기업환경과 요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미도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지못하고 있다. EIU의 동 보고서는 영국의 EMU 미가입이 FDI 유치의 중요한 저해요인이라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

<표 3-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²⁵⁾

(단위: 백만 달러, %)

					(= 111. 1	C E 1, 70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FDI 유입액	FDI 유입액							
EU 15	260,322	478,659	686,012	382,638	369,544	271,285		
영국	74,650	89,540	119,940	61,530	29,180	14,542		
스웨덴	19,413	59,385	22,124	13,084	11,829	3,576		
덴마크	6,675	16,076	35,847	10,237	6,411	2,623		
EU-15에서 치	시하는 비중	<u>\$</u>						
영국	28.7	18.7	17.5	16.1	7.9	5.4		
스웨덴	7.5	12.4	3.2	3.4	3.2	1.3		
덴마크	2.6	3.4	5.2	2.7	1.7	1.0		

자료: EIU(2004a)

과, FDI에 미치는 요인 중 EU 회원, 임금수준, 국내시장규모, 영업환경 수 준, 지리적 거리 등 기타 다른 요인보다 EMU 가입(유로화 도입)이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 베이 조사결과에서도 통화변동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요 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면서, 영국의 EMU 미가입이 FDI 유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EMU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영국의 넓 은 시장규모, 산업클러스터 보유, 우수한 과학기술 등은 여전히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의약품 등과 같은 부문의 FDI 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재무부는 현재까지는 EMU 가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영국은 FDI 유치에 가장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

^{25) &}lt;표 3-8>와 <표 3-9>에서 영국의 FDI 유입액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발표기관의 조사방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는 사실은 여전히 FDI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 3-10> 국별 純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파운드)

		(단위: 백만 꽈군드)
국 가	2000	2001
유럽	127,448	15,996
EU 회원국	124,564	12,202
오스트리아	240	1,622
벨기에/룩셈부르크	147	966
덴마크	-67	-182
핀란드	-196	62
프랑스	6,398	3,079
독일	113,762	448
그리스	624	178
아일랜드	4,679	2,047
이탈리아	327	547
네덜란드	-4,335	6,598
포르투갈	105	120
스페인	1,574	-1,561
스웨덴	1,309	-1,758
EFTA 회원국	408	-1,217
노르웨이	-75	487
스위스	483	-1,705
중・동구	263	1,533
체크	4	214
헝가리	544	730
폴란드	38	321
북미	29,558	27,123
캐나다	2,566	3,452
미국	24,249	19,617
아시아	-3,611	-1,151
중국	410	685
홍콩	-3,309	448
일본	1,390	4,425
싱가포르	-3,387	851
합계	154,246	45,929

자료: 日本貿易振興會(2003)

(단위: 백만 파운드)

		(단위: 백만 파운드 <u>)</u>
국 가	2000	2001
유럽	53,839	30,164
EU 회원국	52,394	30,770
오스트리아	175	-148
벨기에/룩셈부르크	825	179
덴마크	481	173
핀란드	87	57
프랑스	31,722	10,031
독일	10,564	1,613
그리스	-	4
아일랜드	384	723
이탈리아	469	2,873
네덜란드	4,629	14,780
포르투갈	-6	7
스페인	-	236
스웨덴	657	246
EFTA 회원국	740	-1,255
노르웨이	-392	-224
스위스	1,119	-1,090
중・동구	8	10
체크	-	2
헝가리	1	1
폴란드	4	4
북미	15,032	10,720
캐나다	1,882	127
미국	12,741	9,193
아시아	7,637	764
중국	-	-
홍콩	921	66
일본	5,769	505
싱가포르	800	67
<u></u> 합 계	78,495	41,972

자료: 日本貿易振興會(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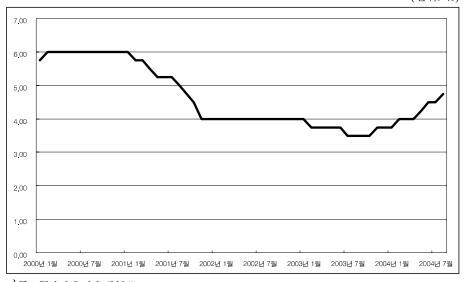
2. 주요 현안 및 과제

가. 기준금리 연속 인상

영란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0%를 중기(약 2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정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2003년 7~11월간 48년 만의 최저수준인 3.50%의 금리를 유지한 후 그해 11월 6일,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세계 4대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그 후 2004년 들어서 2월, 5월, 6월, 그리고 8월에 이르기까지 0.25%포인트씩 모두다섯 차례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는 3.50%에서 4.75%로 인상되었다.

<그림 3-1> 영란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2004)

영란은행의 이러한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영국경제의 경기과열과 가계부 채 증가 및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0% 성장함으로써 2000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편, 2004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3.6%에 달하여 2000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경기과열 에 따른 물가상승현상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2003년 1/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1.5%내에서 유지되었으며, 2004년 6 월에는 15개월 만에 최고치인 1.6%를 기록한 후 8월에는 1.3%, 9월엔 1.1% 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지역의 9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1%보다 낮은 것은 물론 영란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영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이면에는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라 는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영란은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 려해왔다. 영국의 최대 대출금융기관인 Halifax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1 ~5월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1.7~2.3%를 유지하다가 6월 1.2%, 7월 1.3%로 상승폭이 다소 주춤거린 후, 8월에는 2000년 12월 이후 최 초로 하락세를 보여 -0.5%를 기록하였으며, 다시 9월에는 1.4%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상승률로 보면, 2003년 말 15.4%에서 2004년 3~5월 3개월간 20.4%, 4~6월간 21.5%, 5~7월 22.1%, 6~8월 21.3%, 7~9월 20.5% 를 기록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4년 7월 말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는 영국의 주택가격이 정상가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가 에서 약 30% 정도 하락해야 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영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영란은행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버블 붕괴 및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개인 파산 억제를 위한 방편으로 금리인상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영란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금리정책을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 조절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기확장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가격의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현상이 방치되면 자산버블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락 및 개인파산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금리인상조치를 통해 이를 적절히 억제하려 하고 있다.26)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택가격 경착륙및 개인부채부담 가중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영란은행은 보다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지속적으로보내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다소 잠잠해지고 있어서 영란은행의 꾸준한 금리인상 신호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기타 정책과제

영국경제의 미래가 밝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로화 가입 여부는 중요한 국가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 2002년 영국은 EU로의 해외투자 중 8%만을 유치하여 1998년의 29%에 비해 크게 줄어든 실적을 보였다. 이것이 유로화 미가입으로 인한 투자부진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과거 정권보다 유로화에 더 우호적인 블레어 정권은 적절한 시점에서 유로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하나부결될 때의 정치적 위험, 최근 유로권 경제의 부진 및 영국경제의 상대적호조, 반대륙적 국민정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계속 유로권

²⁶⁾ 영국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 초까지 자산 버블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가 있었고, 그 후 영란은행은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경착륙의 방어수단으로도 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밖에 머무를 경우 손실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영국 정 부의 재정은 그동안 엄격한 건전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1999~ 2001년 동안 재정수지는 GDP 대비 1%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재정수지는 2002년에 와서 GDP 대비 -1.7%로 적자로 돌아섰 고 2003년에는 -3.5%로 크게 확대되어 그 절대액과 함께 적자의 증가속도에 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것은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재정계획이 영국경제가 3% 전후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 성된 반면, 실제 성장은 2% 내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세 수 예상하에서 사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출 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3년도 영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계획단 계에서 이미 200억 파운드 이상의 적자재정을 기획하였으며, 실제 세수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급격하게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예산편 성은 불확실한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불확실한 세수규모를 전제로 한 확실 한 재정지출계획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여전히 큰 지역간 소득격차도 문제로 남아 있다. 런던과 남동부지역은 영 국 총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잘사는 지역인 반면,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북동부의 1인당 소득은 영국 평균의 75 ~78%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못사는 북부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역정책도 시행되 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특히 1980년대에 더욱 확대된 지역간 격차 를 줄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또 영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2년도 영국의 제조업은 총 GDP의 18.1%에 불과하다. 현재는 전기, 광학제품, 섬유수제품, 그리고 의약품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추세가 유 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의 확보, 철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4장 대외관계

1. 영국의 對EU 관계

가. 영국과 EU

영국은 자신들이 서유럽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통합과정에서도 영국은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이질성과 거리감은 영국이 유럽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유럽대륙이라는 동질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두 번의세계대전에서 영토가 점령되는 경험이 없었기에 유럽대륙 국가들이 느끼는 유럽통합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똑같은 수준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7)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와 유럽경 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각각 1951년과 1957년 출 범한 후, 영국은 오랜 기간이 지난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²⁷⁾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1946년 당시 영국 총리이던 Winston Churchill의 스위스 Zürich 대학에서의 연설이었다고 볼 때 이는 유럽을 포기할 수 없는 영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처칠은 명예박사학위 수여기념으로 행한 연설에서 "a kind of United States Europe"을 건설할 것을 제창하였다.

EC)에 비로소 참여하게 된다.28) 그러나 이때에도 영국은 EC에 가입하게 되 는 그 당해연도에 EC 가입조건에 대한 재협상과 EC 회원국이 되기 위한 국 민투표 실시에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1975년 국민투표에는 50%의 유권 자만이 투표에 참가하여 EC 회원국으로 남기로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여 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대처 총리의 1기 정부 초기, 영국은 EU 예산구성에서 영국이 내는 순분 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평으로 EU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처 총리 집권 말기에는 일부 보수당 의원은 EU로부터 탈퇴할 것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영국이 뒤늦게 ERM에 가입하게 되면서 경제위 기를 겪게 되었는바, 1990년 ERM 가입 이후 파운드화에 대한 국제자본의 공격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1992년 다시 ERM을 탈퇴하였다. 특히 1992년 EU창설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에 서명한 후부터 부정적인 태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그 후 영국은 더욱 EU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EU 통합의 심화에 반대하 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동안 훼손되었던 EU 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토니 블레 어 총리는 1997년 집권시부터 친유럽적 색채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노동 당의 친유럽적 색채는 과거의 전통과는 다른 것이었다. 과거 1970년대만 하 더라도 유럽대륙과 깊은 사업적 교류를 지니고 있던 영국기업의 지원을 받 는 보수당이 친유럽적이었는 데 반해 노동당은 유럽대륙과는 상당히 동떨

²⁸⁾ 물론 그동안 영국이 유럽공동체의 가입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영국은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의 핵심국이면서도 두 번이나 유럽 경제공동체(EEC)에 가입신청하였으나 드골의 프랑스가 반대하는 바람에 좌절 된 바 있다. 영국이 1973년에 EC에 가입하게 된 것은 드골의 퇴임과 독일에 대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느낀 퐁피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어져 있었다. 이는 유럽화가 세계화로 인식됨으로써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 해질 것을 우려한 영국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당-유럽, 노동당-영국"이라는 구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대처리즘의 영향권에 들어간 보수당과 신노동당 개혁운동에 의해 그 양상이 바뀌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서양관계를 중시한 대처 총리의 보수당 이후 영국 보수당은 노골적으로 유럽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으며, 보수당내에서 유럽회의론자(Eurosceptics)가 득세하였다. 보수당의 우경화는 영국 국민 및 영국 국가에 대한 자존심의 고취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당은 1990년대 들어와 노동조합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연성화, 중도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블레어 총리가 당수가 된 1994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피터 만델슨 등 새로운 노동당을 주창한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영국이 나아갈 바가 적어도 유럽대륙에 대한 거리두기는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을 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로 노동당 지지 지역으로서 영국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 북부의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을 EC의 구조기금이 상당한 정도로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영국 노동자의 유럽에 대한 공포(Europhobia)를 크게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한 블레어 총리는 초기부터 유럽의 중시, 유럽과 미국간의 다리(bridge) 역할, 유럽에 더욱 참여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이를 통한 미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였다.

블레어 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중심역할(leading part in Europe)"을 담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즉 EU 확대 및 통합 관련, 그리고 전 유럽의 안보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취임 초기, 분명히 대처 및 메이저 전 총리에 비하여 보다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쌍무적인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영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정책을 발기하면서 EU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미국

과의 양자관계에 예전보다 소원해진 것은 아니었다. EU·미국간 무역 및 환경정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곤 하였지만, 적어도 이라크 전쟁이 나기 전까지 블레어 총리의 대외정 책에서 친유럽주의(pro-Europeanism)와 범대서양주의(Atlanticism)간에 명시적 인 정책적 충돌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블레어 총리의 적극적인 지지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 국과의 관계보다 자신들과의 관계가 늘 밀려난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 다. 블레어 총리는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을 갖 고 있다. 이는 영국이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설득하는 블레어 총리의 능력에 달려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했 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EU와의 최근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는 EU헌법 비 준을 위한 국민투표이다. 2004년 6월 합의된 EU헌법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 서는 한 나라도 예외없이 EU 25개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 다. 각 회원국은 헌법 발효 목표연도인 2006년 11월 이전에 의회 표결이나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블레어 총리는 EU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포 한 바 있다. 그의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 약 국민투표에서 EU헌법이 부결된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EU통합과 정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 영국과 EMU협상²⁹⁾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및 영연방국가와 전통적인 유대관계 및 경제관계

²⁹⁾ 이 절은 김흥종·박성훈(2004)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를 갖고 있던 영국은 모든 유럽적 이슈(European affairs)뿐만 아니라 EMU협상에서도 유럽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보를 해왔다.30) 영국이 인식하는 유럽은 오랜 경쟁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는 상상하기어려웠기 때문에, 영국은 자신이 완전한 유럽국가로 받아들여지는 데 저항감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영국은 유럽통합에 대한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비록 과반수를 넘지만)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찬성률이 10~15% 낮게 나왔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5~10% 높게 나타났다.31)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영국은 EFTA를 결성하는 등 보다 느슨한 경제통합체를 지향하였고, 1973년에 뒤늦게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는 등 영국은 다른 EC 회원국들에는 항상 '이상한 파트너(awkward partner)'로 인식되어왔다. EMU 및 유로화 사용에서도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영국은 1990년에야 ERM에 가입하였고 1992년 ERM 위기시 탈퇴한 이래 EMU의 비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영국에서 유럽회의론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EMU협상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대처 총리(1979~90년)이다. 대처 총리는 대서양관계(transatlantic relations)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통합에서 연방주의보다는 국가연합체를 선호하였다.32),33) 대처 총리의 뒤를 이은 메이저 총리(1990~97년)는 대

³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의 이러한 행보는 '세력균형의 추'의 역할로 표현 되기도 한다.

³¹⁾ EU 회원국 지위 유지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보면 53% 대 42% (1983년), 77% 대 16% (1991년), 그리고 55% 대 28% (1997년)이었다.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1997년).

³²⁾ 대처 총리는 '다양한 유럽(Europe à la carte)'을 역설하였다. (EC회원국은) 그것 이 통상이든, 국방이든, 아니면 여타국과의 관계이든지간에 혼자보다 함께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유럽은 자기 안에 고유한 관습과 전통과 정체성을 가진 프랑스, 스페인, 영국을 갖고 있을 때야만 더 강해질 것이다. - 1988년 9월 20일 브루쥐에서의 연설문 중 일부.

^{33) 1990}년 대처의 퇴진을 몰고 온 보수당내 반란사건도 보수당 정부의 對유럽정책에서 시작되었다. EMU의 1단계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변함 없는 대처의 유럽회의론, 특히 통화동맹에 대한 거부감은 당내의 광범위한 반발을 몰고 왔다.

처 총리만큼은 아니었지만 유럽회의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1992년 영국의 ERM 탈퇴 이후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유럽이슈에 대 해 前 정권에 비해 훨씬 호의적이었다. EMU 가입 문제와 함께 보수당 정부 가 거부한 바 있던 유럽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조인하였고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에서 제안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경제통 화동맹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반감을 무시하고 EMU에 가입을 추진할 만큼 노동당 정부가 확실한 연방주의적 접근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 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은 EMU체제의 밖에서 EMU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외부인자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MU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의 입장 및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국은 EMU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EC 회원국들과 차별화된 전략적 선택을 나타냈다. 즉 단일 통화의 도입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고, 만약 단일통화가 도입되더라도 국가 간 합의보다는 시장기구를 통한 결정을 선호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 였다. 이를 위해 영국은 기왕에 도입되어 있는 ECU를 유통시키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경화 ECU(hard ECU)', 통화간의 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이 되면 새로운 통화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통화간 경쟁(currency competition)' 등을 단일통화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34) 영국은 단일통화의 도입을 국가간

³⁴⁾ 영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화동맹을 선호하였다. 1단계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들로르보고서의 제안에는 동의하나 2단계에서는 모든 통 화가 ERM에 가입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서 함께 통용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방 만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는 자연히 가치가 떨어져 강한 통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EMS는 고정환율제도와 같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UK Treasury 1989), 이어서 발표된 추가제안에서도 ECU 경화(Hard ECU: HECU)를 새로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시장에서 통화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기본정신에는 변화가 없었다(UK Treasury 1991). 동 제안은 유럽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화폐의 통용은 의미가 없다는 독일의 반대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다.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여러 통화를 외환 및 자본시장에서 거래해본 후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은 통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식은 유럽통합을 궁극적으로 정책적 주권을 이양하는 인위적인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각국의 독립적인 정책이 병립한 이후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정책이 채택되는과정으로 인식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EU 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이 비록 단일통화의 도입에 기본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만약 EMU가 출범하여 단일통화가 채택된다면 이 단일통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매우 엄격한 가입조건을 통과해야 한다는 행태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독일 및 네덜란드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영국의 이러한 입장은 비교적 EMU에 호의적이었던 블레어 노동당 정권도 EMU의 공식출범이 임박했던 1997년과 2003년에 EMU 가입의 선행조건으로서 두 차례나 "다섯 가지 경제적 평가(Five Economic Tests)"를 실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35) 영국은 EMU에의 가입이 영국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소위 경제주기(business cycle)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회원국의 경제여건에 의해 영국경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가를 가장중요한 가입조건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영국이 통화정책은 초국가주의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36) 영국의 EMU협상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1950년대 중반부터 1990

^{35) 1997}년 고든 브라운 재무상이 내건 다섯 가지 기준은 첫째, 경기순환과 경제구 조가 유로화를 도입할 만큼 충분히 조화로운가,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이 있는가, 셋째, EMU 가입이 기업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이 있는가, 셋째, EMU 가입이 기업들로 하여금 영국에 장기투자할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넷째, 영국의 금융산업, 특 히 시티의 도매금융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EMU 가입이 성장률 제고, 경제안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가이다. 브라운 재무상은 2003년 6월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상기시키면서 영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 음을 밝힌 바 있다(Oxford Analytica 10. June. 2003).

³⁶⁾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영국은 EMU에의 가입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년대 초반 EMU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영국이 전통적으로 보여 주었던 유럽통합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그대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1950년대 중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파리조약과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핵에너지공동체 및 유럽경제공동체 등 3개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유럽통합을 시작할 때 이에 참여하지않고 이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1960년 따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설립한 바 있다. 1973년 우여곡절 끝에 당시의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영국은 1979년 통화통합의 단초가 된 유럽통화제도(EMS)가 설립되었을 때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고, EMU협상이 시작된 1989년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 EMS의 경험이 없는 영국은 EMU에 대해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영국은 EMU에 가입할 가장 적당한 시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영국과 유로화

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유로화 도입에 대한 공식입장은 '찬성' 및 '적극적 추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모든 영국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다. 이러한 괴리는 영국의 EM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주저케 한다. 영국은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3개 EU-15 회원국 중의 하나로서 EMU 가입 초기부터 가입선택권(opt-out)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교역 및투자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EMU의 가입 및유로화의 도입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유로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주저케 하는 요인은 첫째, 영국 국민의 고질적인 유럽대륙에 대한 경계심이다. 영국은 과거 유럽역사에서 항상 세

력균형의 추의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의 등장 이후 미국과의 대서양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온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영국 국민은 영국이 비록 유럽국가이지만 영연방 및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영국 국민은 파운드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EMU의 완성이 가시화되는 1997년의 여론조사에서도 단지 17%만이 파운드화를 유로화로 대체하는 데에 찬성하였을 뿐이다.37) 또 하나의 요인은 현재 유로권경제의 부진이다. 지난 7~8년간 영국경제는 유로권 경제보다 항상 더 좋은경제성적표를 받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금리정책으로 인한 경기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영국경제의 동반호황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경제상황이 나쁜 유로권으로의 편입에 대한 저항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럽을 향하고 있었던 블레어 정부로서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언젠가는 실시해야 할숙제로 안고 있다.

라. EU 확대와 영국의 역할

영국은 전통적으로 EU의 심화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EU 회원국의 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는 유럽적 이슈에 대해 연방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EU의 심화보다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EU의 확대가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간 연합체를 선호하는 영국의 전통적 對유럽觀에더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영국이 EU 회원국의 추가 확대,특히 터키의 EU 가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블레어 총리가 집권하면서 EU 통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영국은 EU의 추가적인 확대과정에서도 중·동구권의 EU 가입을 적극 지지 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EU 의장을 맡았던

³⁷⁾ George and Bache(2001), p. 185.

1998년에 신규가입희망국들과 제1차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10월 바르샤바에서의 연설에서 블레어 총리는 EU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2004년 유럽의회선거에 신규회원국들도 참가토록 하기 위해 선거전에 EU에 가입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동구국가들의 EU 가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8년부터이며 이때부터 영국은 중·동구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EU의 제5차 확대 신규가입국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간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운영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대부분 기존 EU 회원국과 상당한 경제적 격차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입예정국들의 소득증가와 제도의 선진화는 EU 확대에 따른 비용 을 줄여주고, 이 국가들의 EU 가입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선 이들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경 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생산활동을 위한 수송, 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통합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원조 이외에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정책자문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제반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Box 4-1> EU 확대 과정

- ▶ 1951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 ▶ 1973년: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등 3개국 EC 가입(1차 확대)
- ▶ 1981년: 그리스 가입(2차 확대)
- ▶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3차 확대)
- ▶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4차 확대)
- ▶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 가입(5차 확대)

이러한 중·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EU의 공동 정책에 대한 적응력 배양이 요구되었다. 가입예정국들이 EU가 지금까지 이 룩한 업적, 즉 정치협력, 경제통화동맹(EMU) 등 EU 관련 조약 및 공동체 법규들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 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EU는 가입예정국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 족할 수 있도록 PHARE, ISPA, SAPARD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EU 가입을 지원하게 된다.

<Box 4-2> EU의 기입지원 프로그램

- ▶ PHARE: 중·동구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Twinning" 프로그램이나 투자를 통해 지원
- ▶ ISPA: 환경 및 수송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EU의 지역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 ▶ SAPARD: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EU의 공동농업정책에 적응하도 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영국은 이러한 EU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신규가입예정국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하우 펀드(Know How Fund)

영국은 중·동구권 국가들의 정치·경제 및 행정부문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신규가입국들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노하우 펀드(Know How Fund)는 영국의 중요한 지원정책 가운데 하나였다.38) 영국은

³⁸⁾ 대부분 중·동구 국가가 이 노하우 펀드에 대한 더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펀드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노하우 펀드를 통해 중·동구의 8개 신규가입국에서 추진되는 EU 확대 관련 프로젝트에 약 3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했으며, 폴란드에만 1989 ~2002년 사이에 1억 3천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은 NGOs, 그리고 British Association for Central & Eastern Europe,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and the Lord Slynn Foundation 등의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2) Action Plans

EU 가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구국가들과 양자간 Action Plans를 제정하였다. Action Plans는 영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후보국을 지원하는 주요수단이다. 이 Action Plans는 EU 집행위원회의 사전가입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3개 중·동구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Action Plans의 목적은 가입후보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배양하는 것으로, 농업에서 지방정부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Action Plans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과범위는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활동계획에는 현재 영국 정부기관, 즉 Whitehall Department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inistry of Defenc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British Council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나 신규로 이행할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단일시장, 법사내무, 금융·조세, 고용·교육, 농업·지역개발, 환경, 미디어, 대외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3) "Twinning" programme

영국은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Twinning" programme에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여기서 "Twinning" Programme(일명 "짝짓기"

프로그램)은 EU가 신규가입국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원활하고 조속한 이행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PHARE의 일환으로 EU 기존회원국의 공무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후보국들에 파견하여 적어도 1년 이상 후보국들의 담당기관을 돕도록 하고 있다. 중ㆍ동구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통 제식 정치 및 관리형태에 익숙해져 있어 민주적인 정치 및 관리체제로의 전 환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들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불 필요한 기구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나 직책을 만들고 새로온 체제를 관리할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대한 외부지원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 된 도구가 "Twinning" 프로그램이다. 짝짓기는 특정한 프로젝트별로 이루어 지며,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통역, 번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필요한 인력을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짝짓기는 후보국을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존회원국들과 후보국들 사 이의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마련하고, 후보국들이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질업무를 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영국은 현재 50명이 넘 는 관리를 신규가입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가입후보국들이 요청에 따라 파 견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기시키고 있다.

현재 영국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국가는 폴란드로, 2004 년 4월 현재 약 36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 뒤를 이어 체크(30건), 루마니아(18건), 불가리아(15건), 헝가리(14건), 라트비아(12건), 리투아니아(9건), 에스토니아(8건), 슬로바키아(8건), 몰타(7건), 슬로베니아(7건), 터키(4건) 등의 국가에서도 Twinn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 Reuniting Europe Programme

영국의 FCO(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는 "Reuniting Europe Programme"을 통해서도 EU 확대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특히 관리체계 개선과 경제성장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EU 통합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EU 확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 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EU 가입과정과 그 지역의 발전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 는 기간마다 그 국가의 특정목표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동 프로그램의 2005~6년 재정기간에는 약 469만 파운 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의 50%를 EU 가입후보국인 터키, 루 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우 선순위에 해당하는 북키프로스(Northern Cyprus), 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 보 포함), 우크라이나 등 3개 지역에 예산의 30%를 지원한다. 그리고 남은 20%는 EU 신규회원국 10개국과 마케도니아의 前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알 바니아, 보스니아 등과 EU와 인접한 국가들인 벨로루시, 조지아, 아르메니 아, 아제르바이젠 등의 국가에 지원된다.

동 프로그램의 주제별 영역은 (i)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ii) 법사 및 내 무, (iii) 시장경제 등 모두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역의 관심대상에 따라 강조되는 주제별 영역이 다르다. 우선 신규가입국 10개국의 경우는 사법제도, 구금과 치안, 경제개혁 촉진 등에 집중되며, 루마니아와 불가리 아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발칸지역국 가에서는 정치 및 경제의 운용과 내무법사 이슈에 대한 능력배양을 돕는 데 집중된다. 터키의 경우는 인권(human rights)과 정치지배, 그리고 이민 및 국경지역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벨로 루시의 경우는 민주주의제도의 운용과 유럽통합능력, 국경지역 이슈 등을 주로 다룬다.

2. 영국의 對美관계

가. 특별한 관계

영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유럽 및 영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 NATO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핵, 국방, 정보분야 등에서 미국과의 밀접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영·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영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2003년 기준, 영국의 대미 수출은 404억 유로로, 영국 총수출액의 15.4%를 점하여 영국의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해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62억 유로로 영국 총수입액의 9.7%에 해당되며, 미국은 독일(14.1%)에 이어 영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영국은 미국내 최대투자국(825억 파운드 투자)이며, 미국의 영국내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영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특별한 동반자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유지하려는 영국의 노력은 그동안 변함 없는 중 요한 대외정책이 되어 왔다. 양국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민주주의와 자 유무역을 신봉하며,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한다는 점에 서 영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영국 은 이러한 면에서 2003년 대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미국에 대한 "특별한" 관계는 영국 입장에서 더욱 강조된다. 미국은 분명히 영국을 신실한 동지로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영국이 유럽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 있어 영국의 중요성은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영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1997년 집권한 블레어 총리는 이러한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소원했던 유럽대륙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EU 통합과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독일 등 유럽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미국의노력에 대해 블레어 총리는 미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나. 블레어 총리와 이라크 전쟁

지난 2004년 7월 21일,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노동당 당수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1994년 7월 21일, 41세의 젊은 나이로 노동당 당권을 승계한 블레어 총리는 자유시장경제원칙과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결합한 '제3의길'을 주창하면서 노동당을 새로운 조류에 맞춰 변모시켰다. 그 결과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대승하여 1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였고, 2001년 총선에서 승리, 연속 2기 집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워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한다는 중도적 방향을 주장하였다. 블레어 총리는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이자율정책을 사용하게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영국경제는 노동당 집권 후 연평균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EU-15 회원국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한편, 2.5%의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하회하는 물가안정을 이루었고, 또한 실업률도 EU-15 의 평균실업률 7~8%보다 매우 낮은 4~5%대를 기록, 침체된 유럽경제 속에서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그동안 소원했던 유럽대륙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여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려는 외교적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동구국가를 참여시키는 제5차 EU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EU내에서의 영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갔다.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와 균형 있는 미국과 유럽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국내외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영국이 참여하면서 그의 지지도는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초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총리의 노동 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17년 이래 최악에 이르러 유권자의 불과 32%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조지 부시의 푸들'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미국과 영국의 對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으로 EU내에서 블레어 총리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對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의사담 후세인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가오류로 판명되면서 부당한 전쟁을 강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블레어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4년 2~6월까지 이라크 관련 정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온 영국의 버틀러위원회는 7월 14일,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되었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이라크가 45분 안에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라크가 최근 생화학무기를 생산했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왜곡했거나 과장된 정보가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태만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실질적으로 블레어 총리에게 정치적 면죄부 를 주었다. 이라크에 침공하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확대. 왜곡했다는 국내외 비판과 함께 사임압력을 받아왔던 블레어 총리로 서는 버틀러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고 불법적인 전쟁을 벌였다는 최악의 평가는 모두 피하게 된 것이다. 퇴임압박 을 받았던 블레어 총리는 200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까지 총리 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3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제3의 길'을 주창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2기 연속집권이라는 위 업을 달성했던 블레어 총리의 향후 정치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對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가 오류로 판명되면서 당내외에서 사임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영국 국민들 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유로화 도입 및 EU 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에 그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01년 당시 총선에서 압승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노동당과 블레어 총리에 대 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여론조사에서 블 레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3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경제호황을 이끌어낸 블레어 총리의 능력을 영국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고든 브라운 현 재무상 이외에는 블레어 총리를 대적할 만 한 인물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차기 총선에서 블레어 총 리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블레어 총 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의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당수의 지지도는 35%로 블레어 총리의 지 지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영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국 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유럽대륙보다는 미국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안보문제, 경제적으로는 무역·투자증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입장이 향후 변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볼 수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동시에 EU내에서 영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미국과 유럽대륙을 잇는 다리(bridge)역할을 꿈꾸는 블레어 총리의 포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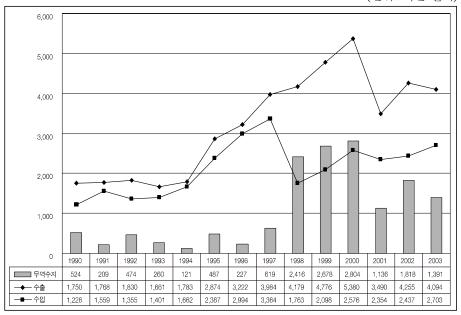
제5장 韓‧英 경제관계

1. 교역

2003년 기준으로 영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대상국 중 8위이며, 수입대상국 중 15위에 해당된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독일에 이어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수출대상국이다. 또한 EU 15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의 무역수지흑자 대상국가에 해당된다.

<그림 5-1>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한국은 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8 년 이후 흑자 폭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난 2001부터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9월간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7.0% 증가한 40억 5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6.5%나 증가한 3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3년도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4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27억 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컬러 TV 등 첨단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귀금속, 주류, 기계, 의약품, 합성수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 품목별 수출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단위: 백만 달러, %)

<u></u>	<u>ы</u> п	200	3년	2004년([1~9월)
순위	품 목	금액	증가율 ¹⁾	금액	증가율 ²⁾
1	무선전화기	381	35.5	774	229.2
2	승용차	573	25.8	704	86.6
3	선박	230	-48.9	343	49.3
4	모니터	409	39.2	282	0.9
5	컴퓨터부품	299	70.7	242	8.1
6	집적회로반도체	266	-64.7	186	-9.3
7	컬러TV	227	504.8	151	10.2
8	평판디스플레이	45	6,465.8	92	360.2
9	타이어	82	34.7	75	32.5
10	냉장고	70	28.6	65	43.7
	총수출	4,094	-3.8	4,054	37.0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對영국 수출은 무선전화기, 승용차, 선박,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수출주력제품이 주도하였다. 무선전화기(229.2% 증가)와 평 판디스플레이(360.2% 증가)가 큰 폭의 수출신장세를 올린 반면, 우리의 수 출주력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9.3%)는 오히려 부진하였다. 수입동향을 살펴 보면, 2004년 9월 기준으로 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2003년에는 172.8%, 2004년 1~9월간에는 무려 1,335.4%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강반제품은 2003년 2만 9.724.4%나 증가하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2004년 1~9월간에는 24.7%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류는 2004년 들어 다소 수입이 줄어 15.5% 감 소하였다.

<표 5-2> 품목별 수입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단위: 백만 달러. %)

	Ī	i		(2 11.	10 2-1, 70)	
순위	품 목	200	3년	2004년(1~9월)		
七刊	ti 🗇	금액	증가율 ¹⁾	금액	증가율 ²⁾	
1	그	577	172.8	1,195	1,335.4	
2	주류	248	1.7	160	-15.5	
3	계측기	101	13.3	110	52.7	
4	의약품	104	2.5	104	40.8	
5	자동차부품	92	27.2	89	42.4	
6	집적회로반도체	59	39.0	72	80.1	
7	합성수지	63	23.5	54	21.8	
8	펌프	35	-36.7	46	90.5	
9	강반제품	54	29,724.4	39	24.7	
10	항공기부품	44	-17.0	37	17.6	
총수입		2,703	10.9	3,066	86.5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2. 투자

가. 한국의 對영국 투자

2003년 한국은 영국에 총 5건, 약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였으며, 2004년 들어서는 더욱 증가하여 2004년 9월까지 총 7건, 약 2억 6천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였다. 한국은 영국에 1968년 이후 총투자누계(신고기준)는 144건, 약 2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한국의 對영국 투자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제조업분야 투자진출은 향후 어려울 전망이다.

<표 5-3> 한국의 對영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기준)

2000년		200	1년	2002년		2003년		2004년(1~9월)		총누계 (1968~2004년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급액	건수	금액
15	56	8	323	11	72	5	126	7	269	149	2,5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4)

<표 5-4> 영국에 진출한 주요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생산법인	○ 북잉글랜드: 삼성전자, LG 전자○ 북아일랜드: 대우전자부품, 휴맥스○ 웨일즈: LG 전자 등
판매법인	ㅇ 상사, 중공업, 해운, 전자(판매) 46개사 및 금융기관 25개사

자료: KOTRA(2004)

2004년 5월 1일부터 EU가 확대됨에 따라 서구유럽 생산거점의 경쟁력 상 실이 가속화되면서 영국에 진출했던 국내기업들이 최근 영국 생산라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영국에 진출한 한국 전자업계는 2001년부터 전 자레인지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제도가 소멸되면서 값싼 중 국산 제품이 대거 밀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현지 공장 청산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2004년 1월에 북잉글랜드 소재 윈야드 공장 을 폐쇄키로 결정하였다. 1995년 설립해 모니터와 전자레인지를 생산해온 윈야드 공장이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기지를 슬로바키아로 옮길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LG전자도 2004년 4월에 지난 1988년 이후 영국에서 전자레인지를 생산해온 'LG전자 북영국법인(LG Electronics North of England)'을 청산키로 발표하였다. LG전자 북영국법인은 중국산 전 자레인지의 가격공세와 영국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 창출이 불가 능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생산량 감소분은 중국공장에서 대체할 계 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지난 1988년 이후 영국생산법인(DEUK)에서 생 산해오던 VCR 헤드의 핵심부품인 드럼라인이 VCR 쇠퇴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기능 일부를 국내 주안사업장으로 최근 이전하였다.

나. 영국의 對한국 투자

<표 5-5> 영국의 對韓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기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9월)		총누계 (1962~2004년 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급액
44	84	51	432	36	115	55	871	45	607	619	3,439

자료: 산업자원부(2004)

2004년 9월 기준으로 영국은 EU 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 다음으로 對韓 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3년 영국은 한국에 총 55건, 약 8억 7천만 달러, 2004년 3/4분기에는 약 45건, 6억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여 1962년 이후 누계치(신고기준) 기준으로 2004년 9월 현재 총 619 건, 34억 3천만 달러의 對韓 투자를 기록, EU 국가 중 네덜란드(109억 달러), 독일(59억 달러) 다음의 3위 투자국에 랭크되고 있다.

<표 5-6> 영국기업의 對韓 투자 현황

연 도	현 황
1998 ~99년	• BT(4억 달러): 통신- LG정보통신 지분 23.49% 참여 • TESCO(2.5억 달러): 유통- 삼성물산 유통부문 지분 81% 인수 • PowerGen(2.1억 달러): 발전- LG에너지와 아산만가스 발전소 건설 • Allied Domecq(1.2억 달러): 주류 제조- 진로발렌타인社 지분 70% 참여
	• Millennium Corpthone Hotel(2.3억 달러): 호텔- 서울힐튼호텔 인수
2000년	 DB Investment(4천만 달러): 증권- 한국도이치 증권 출자 BOC Holdings(1천만 달러): 가스- 비오씨가스코리아 증설투자 Electra Far East(700만 달러): IT 벤처- 로커스에 투자 PPMV Nominees(600만 달러): 자동차부품- 만도공조에 투자
2001년	 Reckitt Benckiser(1.3억 달러): 가정용품- (주)옥시 인수 British American Tobacco(1억 달러): 담배- 담배제조공장 설립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7.6백만 달러): 투자신탁, 선물중개
2002년	 British American Tobacco(2,200만 달러): 담배제조공장 설립 추가 투자 H.W.Limited(7,100만 달러): 조립금속 제품 제조 등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 Ltd(3,700만 달러): 투자신탁, 보험 등 Burberry Int'l(1,200만 달러): 의복 도소매업 등
2003년	 Ebay KTA(UK) Ltd(388백만 달러): 전자상거래업 Total Holdings U.K. Ltd(387백만 달러): 석유화학 기초화학품 제조 TI Automotive Holdings Ltd(8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제조업 Amec Investments Ltd(600만 달러):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자료: KOTRA(2004)

3. 주요 통상현안

가. WTO 관련 주요 통상현안

한국과 영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EU 차원에서 조선, 철강 및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제한의 통상이슈가 진행되고 있다.

한·EU 통상이슈 가운데 영국은 우리에 대하여 법률 및 금융서비스, 방 송서비스, 외신기자의 활동, 주류 label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통상이슈를 제기 하고 있다. 우선 영국은 EU내에서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요 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도 꾸준히 제 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자국의 BBC 방송(BBC World)의 방영시간 확대 를 위해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 외국채널에 할당된 10%의 비율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 재경부 등 한국정부를 취재하는 press club에 외신기자들의 가입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제 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국세청 등에서 주류에 대한 세원을 명확하기 위해 도매와 소매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label을 구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 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 영국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 밖에 현재 북미에서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대구머리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하이닉스 반 도체의 Dram module의 영국 수출과 관련한 원산지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 었다. 영국 관세청(HM Customs and Excise)은 하이닉스의 미국 유진공장에 서 생산된 웨이퍼로 한국에서 조립한 D-Ram module에 대해 처음에는 한국 에서 실질적인 공정(substantial processing)이 발생하였고, 제품의 세번(tariff heading)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체 공정 중 미국에서 발생한 웨이퍼 가공공정이 제품생산에서 95% 비용을 차지하는 핵심공정이므로 원산지는 미국이며, 단순 조립장소에 부과한 한국에 원산지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나. 무역·투자 원활화 관련 사항

1) 영국의 세관검색 강화

영국 정부의 이라크와 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 안전조치를 위한 세관의 검색이 강화되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영국의 세관 당국은 수출제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수출기업은 시간소비는 물론 벌칙금까지 지불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불리한 조치를 당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며, 대개 반테러정책과 관련 제정된 새로운 규정을 몰랐거나 사전경고를 세관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회사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도 영국으로 제품수출시 컨설턴트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2) 영국내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합의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영국에 진출한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들이 영업활동 및 현지정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2001년 4월부터 본격 논의된 영국내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관련 제반문제점이 2002년 9월 20일 한・영 양국간에 최종 타결됨에 따라 영국에 거주한 지5년 미만인 거주자로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은 영국 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운전면

허증이 영국내에서 인정됨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 민의 생활의 불편완화는 물론, 한·영 양국간 경제·통상·투자활동 증진과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북아일랜드내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북아일랜드에서도 2005년 중반부터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어 우리 상사 주재원 및 교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내 에서는 2002년 9월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어 왔으나 북아일랜드는 관계법령 및 담당기관이 상이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을 위한 별도의 행 정절차가 진행되어왔다.

4) 서울~런던간 항공편 운항횟수 주 11회로 증편

우리 정부는 2004년 5월 런던에서 개최된 한 · 영국간 항공회담에서 서울 ~ 런던간 여객편 운항횟수를 현행 주 8회에서 주 11회로 증편하기로 영국 측과 합의하였다. 서울 ~ 런던 노선은 그동안 여행객이 늘어나 좌석난이 심화되어오던 노선이었으나 금번 운항횟수 증편에 따라 우리 국적항공사의 매일 취항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업계 인사들이 보다 편리한 일정으로 서울을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양국간 경제통상 및 투자진흥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Convention) 발효

1995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1999년 4월 양국 정부간 서명을 거쳐 200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 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억 원의 세금면 제효과가 기대된다.

<부록> 개 관

□ 자연지리

- 국토면적: 24만 2,910km(한반도의 1.1배, 남한의 2.5배)

- 인 구: 5,959만 명(2002년 현재)

- 기 후: 온대해양성 기후

- 시 간 대: GMT와 같음

□ 행정

- 정식 국명: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 도: London(인구 730만 명)

- 주요 도시: 버밍햄(인구 102만 명), 글라스고우(인구 61만 명)

□ 정치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여왕(Her Majesty Queen Elizabeth Ⅱ, 1952년 2월 6일 즉위)

- 의회제도: 양원제

- 총 리: 토니 블레어(Tony Blair)

- 주요 정당: 노동당, 보수당 등

□ 사회 · 문화

- 밑 족: Anglo-Saxons, Celts
- 언 어: 영어(Wales지방 인구의 19%는 웨일즈어 사용)
- 종 교: 성공회(50%), 개신교(30%), 가톨릭(11%), 기타(9%)
- 공 휴 일: 6월 셋째 토요일(여왕탄생기념일)
- 도 량 형: Metric System으로의 대체를 시도 중이나 아직 Yard, Pound System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한·영 우호통상조약 체결: 1883년 11월 26일
- 국교수립: 1949년 1월 18일
- 체결 협정:
 - 사증면제협정(1969년 12월 18일)
 - o 공업소유권보호협정(1978년 2월 19일)
 - o 이중과세방지협정(1978년 5월 13일)
 - 투자증진 · 보호협정(1983년 개정)
 - 항공협정(1990년 개정)
 - 사회보장협정 체결(2000년 8월 발효)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흥종. 2003. 『국별 분석-영국, 한국의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흥종·박성훈. 2004. 『EMU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지역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근간).

산업자원부. 2004. 『주요국의 對韓투자』, 각월호.

KOTRA. 런던무역관 웹사이트(http://www.kotra.or.kr/ktc/TC010S.jsp?trade_cd=9512)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2004. 『해외투자통계정보』, 각월호.

日本貿易振興會 2003 ヅエ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외국문자료]

7
EIU. 2004a. World Investment Prospect; The Revival of Globalization?
2004b.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2004c.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각 월호.
Europe Information Service. European Report. 각 월호.
European Commission. 2004. Autumn 2004 Forecasts.
Eurostat. 2004a.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4b. News Releases.
George, S. and I. Bache. 2001.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Global Insight. 2004.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OECD. 2004.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Oxford Analytica. 2003. No early referendum on euro. (June 10).
2004a. United Kingdom: Butler report released. (July 14).
2004b United Kinodom: Pressure on Blair eases (July 21)

UNCTAD 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United Kingdom Treasury. 1989. An Evolutionary Approach to Economic and Monetary Union, November, London: HMSO

_. 1991. Economic and Monetary Union Beyond Stage I: Possible Treaty Provisions and Statute for a European Monetary Fund, Proposals by the UK Government, January, London: HMSO.

영국 FCO(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웹사이트(http://www.fco.gov.uk/)

Executive Summary

Understanding the British economy and prospects for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Heungchong Kim · Kyuntae Kim

Declining since its heyday in the 19 century, the British economy has revitalized again since early 1990s. Ever since 1993, the UK economy has enjoyed its longest period of expansion, Real GDP has grown by an average of 2.95% per year and per capita income of the country reached over US\$30,000 in 2003.

The painful structural reform over the years is largely credited with the revival of the British economy. The British economy had been suffering from chronic economic recession and frequent labor disputes and strikes, which led to the total collapse in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Thatcher era, economic reform such as improv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overall deregulation in financial market had been conducted, which brought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abric of the British society as well as its economy.

Tony Blair, who gained power in 1997, advocated "the third way," of maximizing economic efficiency with enhanced social solidarity. He wants the UK to be a bridge between the US and Europe, and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fifth EU enlargement. Blair's unpopular support for the Iraqi war and Bush has created a backlash against him. Blair's middle way includes the approval of the EU convention and referendum for EMU.

Korea and the UK are proud of its long and intimate history of economic relationship since they started to communicate some 200 years ago. Among European nations, the UK is the second big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both have been very active in investing in each other over the past ten years. Despite some complicated trade issues including openness in service market and mutual recognition issues, the future prospects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bright under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reciprocity.

KIEP 발간자료목록(2000~04. 11)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瀞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裵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趙錫軍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裵嬉娟
04-01	南亞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朴映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	・金均泰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銀淑
00-02		勇錫
00-03	= = 1 = 1 1 2 1 1 1 1 1	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徐	
00-05		志鎬
00-06		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	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	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	: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	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	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金	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望 構想 金昌男・千	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全	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	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	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ㆍ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	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	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차	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	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	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李	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李	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	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	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	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	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겸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趙顯城	変 外

■ 지역연구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金興鍾・金良姫・朴英鎬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03-02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李章揆・趙顯埈・吳東胤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鄭在完・權耿德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朴馥永

■ 정책연구

00-01 WTO 뉴라운드 規節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 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00-05

金準東・李長榮・李漢煐・金龍奎・崔重熹・許 琮・李漳源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00-06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姫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 旭・金準東・梁俊哲 80-00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稙・楊斗鏞・王允鍾・黄祥仁 00-09

00-10

00-11 WTO 新涌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2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00-13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제3차 ASEM 頂上會議: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5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南相列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2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黄祥仁・金寅培・辛仁錫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尚謙・朴仁元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曺琮和・金于珍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화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ㆍ시청각ㆍ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鄭在皓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魯在峯・李鍾華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崔允僖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權栗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朴淳讚 동아시아 주요국의 화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王允鍾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羅秀燁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鄭在植・曺琮和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姫・趙炳澤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權栗・金玧慶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1990년대 이후 한ㆍ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晳·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1-04

01-05

01-06

01-07

01-08

01-09

01-10

01-11

01 - 13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2-11

02-12

02-13 02-14

02-15

02-16

02-17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 이로 洪裕洙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02-23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槿・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 · 중 · 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 • 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03-01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화율과 시사점 姜三模・朱尚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03-05 地晩洙・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池晩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鄭仁教・吳東胤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栗・鄭仁教・朴仁元 03-08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金良姫・金恩志・程 勳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03-10 曺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03-12 安炯徒・尹德龍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03-13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03-15 趙明哲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6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뱡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官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金準東・金鍾一・姜俊求03-23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鄭仁教 外03-24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 根03-25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敎 外

金興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1989)

영국 University of Oxford MPhil in Economics(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1999)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hrist Church, Honorary member(200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現, E-mail: hc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2003)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2004) 외

金均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kt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04) 「최근 프랑스 경기침체와 경제개혁 전망」(2004) 외

지역리포트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英 경제협력의 과제

2004년 11월 20일 인쇄 2004년 11월 25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73-7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Understanding the British economy and prospects for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Heungchong Kim · Kyuntae Kim

영국경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활기찬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경제가 부활하기까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이 있었다. 대처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1997년 총선에서 집권한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워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하는 중도적 방향을 지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EU의 5차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영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산적한 통상 현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